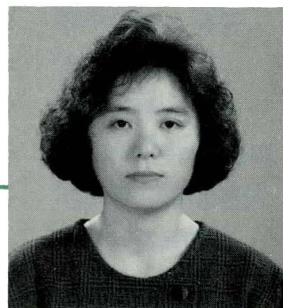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모색



한혜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논의의 배경

오늘날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고유의 가치를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로 나뉘어지는데, 그러한 견해차는 자원봉사와 공적 사회복지 발전간의 관계를 보는 시각의 차이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자원봉사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복지예산을 감축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공적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원봉사는 사회복지가 좀 더 제도화된 이후에 활성화되어도 늦지 않은,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발전을 국가에 모두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복지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자원봉사의 활성화란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 부문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은 1994년 예산기준으로 GNP의 1.9%를 차지하여, 국제적으로도 국민소득수준 대비 평균 지출수준을 훨씬 밑도는 열악한 재정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우선순위는 아직 공적 책임의 확대, 사회복지전달체계

자원봉사와 공적 사회복지 발전간의 관계를 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나 방향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진다.

공적 사회복지가
해야 할 일을
자원봉사를 통해
해결해서는 안되며,
자원봉사가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을
메꾸어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 확립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에 놓여 있으며, 국가가 할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공적 사회복지가 해야 할 일을 자원봉사를 통해 해결해서는 안되며, 자원봉사가 부족한 공적 사회복지예산을 메꾸어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하며, 깊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 사회가 가진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급속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들과 특정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문제들까지 모두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지적 또한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가 공적 사회복지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다. 선도성 이론에 의하면, 현대사회에는 국가가 당장 직접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유형의 서비스가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자각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일반인들도 그 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검증되면 궁극적으로 국가가 맡게 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자원봉사의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서 국가부문으로 흡수된 복지서비스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를 들면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아동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자원봉사가 복지국가보다는 복지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참여율이 매우 낮고, 참여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서 국민들은 자원봉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를 향한 민간 차원의 노력보다는 정부의 개입이나 활동이 더 적극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자원봉사 현황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원봉사의 참여율 자체가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성인의 2% 미만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에서는 약 3천 7백만명(인구의 25%)이 연간 240억 시간을 자원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영국에서도 15세 이상 인구의 15% 정도가 자원봉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자원봉사 참여의사를 가진 시민의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1993년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 45.5%가 앞으로 가능하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고, 1996년 한 일간지 전화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 시민의 69%가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원봉사 참여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상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시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다음으로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상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사회에는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대상 층은 자원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중고등학생들과 이들의 교사 및 부모들이다. 이들은 자원봉사의 수요처나 활동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거의 마련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은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며, 참여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상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체계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만하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은 가짐으로써 허위로 자원봉사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부작용이나 단순 노력봉사만 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일반 성인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199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자가 받기를 희망하는 지원내용으로는 경력인정(19.6%), 사고보상(18.4%), 포상수여(17.4%)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어느 지원책도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인구의 연령, 전문성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즉,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 가정주부, 노인 등 대상에 따른 적합한 자원봉사 분야나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노인인력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하여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3.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처럼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고,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체계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만하다. 1994년부터 한 일간지가 자원봉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임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일부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시 자원봉사 경력자를 우대하거나 승진 등에 자원봉사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사례도 등장하였다.

1995년에 발표된 교육개혁 내용 중에는 중고생의 학생자원봉사 의무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실제로 서울 및 부산에서는 1995년부터 중학생들의 고입 내신성적에 자원봉사 경력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대구·경남·전북 등에서는 올해부터 중고등학생들에

대해 연간 30~50시간의 자원봉사를 의무화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자원봉사활동 기록란도 마련하였다. 일부 대학에서 사회봉사 과목을 졸업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여 현재 사회봉사 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27개 대학에 이른다. 또 지난 9월에는 전국의 총학장이 참여하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고생, 대학생은 엄청난 자원봉사자 공급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혹은 이 거대한 인력자원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자원봉사의 기본속성상 위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하여 민간차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심과 개입이 훨씬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수준에서는 1994년에 그동안 자원봉사를 실시해 왔던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이 중심이 되는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원단체간의 정보교환, 봉사원 교육 및 모집과 함께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와 같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우리의 자원봉사가 가지는 문제 즉,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줄 체계를 구축하거나 정부의 지원방향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매우 빠르고도 강력하다. 비록 법제정이 이루어지진 못했으나 지난 1994년에는 자원봉사에 관한 여당안과 야당안, 두 개의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었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여러 정부부처가 직접 나서서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상하거나 설치할 정도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내무부는 「자원봉사센터」를, 문화체육부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자원활동센터」를,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 지부에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결성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원봉

흥미로운 것은,
민간차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심과
개입이 훨씬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은 아직 자원봉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는데 비해, 정부측은 공공조직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사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전 구청과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접수창구를 개설한 바 있으며, 구청들도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고, 송파구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를 발족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움직임은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해 민간보다 정부측이 더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한다. 즉, 민간은 아직 자원봉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는데 비해, 정부측은 공공조직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민간단체들의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1994년에 자원봉사에 관한 여당과 야당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둘러싸고 대립을 보였을 때에는, 시민단체들이 공청회를 열고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여 선거운동을 자원봉사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1995년에 창립된 한국자원봉사포럼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나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조정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원봉사 관련 전문가나 실무자, 혹은 정치가나 공무원 등의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선진국의 경험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자원봉사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이다. 그리고 공사분리의 원칙에 따라 민간활동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오랫동안 순수한 민간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최초의 자원봉사센터도 1926년 보스턴에서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1995년 현재, 미국의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에 498개가 있는데, 이중 약 46%가 순수하게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만을 담당하는 센터이며, 38%는 공동모금회(United Way) 부설기관이고, 12%는 대학이나 적십자사 등의 민간단체 부설센터이다. 지방자치단체 부설센터도 20개(4%)나 되는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

터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국가가 자원봉사의 확대를 위해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즉, 국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재정적자와 제한된 세입으로 인해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미국정부는 사회복지를 위해 공공과 민간 영역이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하는 것을 공공정책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봉사는 더욱 다양해졌고, 연방의 지원을 받는 조직들이 만들어졌으며, 평화봉사단(1961), 국제평화봉사단(VISTA, 1963) 등과 같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 1962년과 1967년의 사회보장법 개정안에서는 자원봉사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1970년에는 전국적인 자원봉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전국자원봉사센터(NCVA, The National Center for Voluntary Action)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1990년에 결성된 촛불재단(Point of Light Foundation)의 전신이 되었다. 촛불재단은 자원봉사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촉진시키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5천개가 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자료센터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자원봉사자 개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자원봉사기구(CNS, 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라는 독립적인 연방기구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현재 민간부문 자원봉사활동은 촛불재단, 공공부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은 보건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단체간 혹은 부처간 갈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각 프로그램마다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특히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젝트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상대로 계약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공사분리의 원칙에
따라 민간활동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오랫동안 순수한
민간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의 자원봉사는
처음부터 정부에
의해 육성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후생성은 자원봉사
관련법의
제정에서부터
자원봉사단체의
관리, 재정지원 등
모든 행정업무를
단독적으로
수행한다.

한편 일본의 자원봉사는 처음부터 정부에 의해 육성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정부가 민생위원법(1948), 자원활동기본육성요강(1968) 등을 통해 20만명의 민생위원을 2,500개의 자원봉사센터에 배치해 주었다.

후생성은 자원봉사 관련법의 제정에서부터 자원봉사단체의 관리, 재정지원 등 모든 행정업무를 단독적으로 맡고 있으며, 지역단위의 자원봉사활동 조정 및 연계기능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외에 환경, 교통, 청소년 등의 자원봉사활동도 관장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를 주요 분야로 삼고 있으며, 자치성, 문부성 등의 다른 부처도 협의회의 창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일본에는 현재 약 500만명의 자원봉사자와 1,800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일본 후생성이 자원봉사단체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미국과 같은 공개경쟁을 통한 프로젝트별 지원이 아니라 단체별로 연간 예산을 뒤통으로 지원하는 단체별 지원방식이다. 이같은 관 주도적이고 수직적인 지원체계로 인해 일본의 자원봉사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최근 고베지진 등을 계기로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자원봉사단체연합회나 자원봉사연락회의체를 결성하는 등 중앙정부의 개입을 줄여나가고 민간의 자율성, 자발성을 중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5. 향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향

중앙집권적인 관리체계의 지양

우리는 자원봉사를 자신의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활동으로 정의하며, 자원봉사의 공익성, 자발성, 무상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즉, 자원봉사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나 조직, 혹은 한 정부부처의 이해를 위한 활동이 아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누구의 강요나 혹은 명령에 의한 활동이 아니므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위로부터의 관리

체계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활동이다. 따라서 대가를 지불받는 활동은 자원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점에서 정부의 지원도 무상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이러한 자원봉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을 존중하여 민간의 자발성, 시민참여의 특성을 살리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자원봉사의 기본철학과 이념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영역이나 분야, 분야별 프로그램, 지원방안의 제도화, 관련 정책방향 등을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당분간 지나친 관심과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특히 중앙정부가 직접 자원봉사조직을 만드는 등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어디까지나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민간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부가 만든 일사불란한 자원봉사 관리체계는 국민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에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자원봉사의 활성화에도 한계를 가진다.

또한 현재와 같은 다양한 부처의 관심과 개입은 자원봉사 분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행정지원체계가 지역사회내에서 잘 조정되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중앙집권적이고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관리체계를 통해 전국민이나 자원봉사단체를 조직화하려는 발상을 가지기 보다는, 자원봉사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만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 행정지원체계가 어느 부처로 일원화될 경우라도, 다원화되고 있는 직능별, 전문영역별 특수성을 인정하여 상호간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프로젝트별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의
자발성, 시민참여의
특성을 살리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자원봉사의
기본철학과 이념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단위에서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지역단위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단위에서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즉, 미국과 같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진 센터가 필요한 것이다. 1995년 국제자원봉사운동협회(IAV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와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이 공동으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란 지역사회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조정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자원봉사자와 그 수요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다.

그리고 지역내의 언론매체를 통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 시민에게 알리고 수요처 기관의 조정자나 자료담당자들을 교육·훈련시키며, 그들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 인정하기 위한 특별행사를 주선한다. 즉, 자원봉사센터는 지역내에서 자원봉사에 대해 가장 정통한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와 지도력이 결집된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부처별로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현재의 센터들이 얼마나 지역사회내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통안전 분야를 모두 포괄하여 자원봉사자 발굴, 모집, 교육, 배치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 기능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한다. 이같은 협의회는 설치단위는 인적자원 동원가능성, 지역사회 욕구규모,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1개,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당 1개 등 지역 특성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회원단체는 시·군·구 단위의 각종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포함)로 하고, 이사회는 각 회원단체장, 지역사회 유지 및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지역사회내 자원봉사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단 협의회내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

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 지원제도의 확충

일반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적, 혹은 재정적 지원이 요청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원봉사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경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의 무상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대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대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경계는 어디인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어도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합의점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지원제도를 제시해 보면, 첫째, 「자원봉사보험제도」와 「자원봉사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자원봉사 경력을 저축해 두었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이 자원봉사한 시간만큼 우선적으로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와 자원봉사자 발굴·모집·배치를 위한 전산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원봉사전산망」(VT-NET)이 모든 자원봉사 분야를 포괄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는 지역단위에서의 교환이 더 중요하므로 지역 자원봉사협의회의 전산정보체계 구축과 전문가를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
지원제도는
자원봉사의
무상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원봉사 대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